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보호

이 셋 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간사)

정부는 1996년 6월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전자주민카드는 현행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초본 사항, 인감증명서, 지문등 7개분야 42개 정보를 통합한 새로운 '통합신분증명제도'로서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었을 때는 연간 통조본 1억 7천만통, 인감증명 5천7백만통의 비용절감, 국민연금증서 포함하여 1천억원정도의 비용 절감효과가 생기고, 본적지나 동사무소등에 일일이 갈 필요 없이 주민 발급기관에서 필요한 증명 발급을 받게된다. 또한 다른 증명서를 별도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어 국민의 편의가 증대되고, 변조나 위조의 가능성이 적어 신분 확인등에 있어 주민등록증보다 우월하게 되는 등,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맞는 신분증명제도라고 한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21세기 정보화사회는 장미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 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전자주민카드사업시행으로 각종 개인정보가 통합된 후에는 정부의 주장처럼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크레킹(일명 해킹), 내부자 관리 소홀과 공모에 의한 유출, 기업등

사실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적 정보유출은 막을 수가 없다. 현재 행정전산화 이후 정보유출의 양태 중 내부자 공모로 인한 정보유출이 7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전산화된 정보는 사고로, 혹은 실수로 고의로 그것이 파괴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전산화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고려는 물론이고 완벽한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문과 사진, 국민연금 관리공단 관리자

밀한 것, 스포츠신문 연애란에 나오는 연애인들의 사생활을 떠돌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이다.

법부터 세워야 한다.

정부는 통합전자주민카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현행 주민등록법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예정인 7개 분야 42개 정보는 기존의 주민등록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증명 체계이므로 충분한 국민적 여론 수렴과 별도의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해

뒤늦게 설명회를 열면서 '감시의 의도는 전혀없고, 주민편의와 행정효율화를 위해서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복잡한 것이 통일되고 번거로운 것이 간소화되는 '주민편의와 행정효율화'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신분증명체계에 있어 진정한 불편을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

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전산화, 네트워크화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 카드사업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카드를 만들기에 앞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공권력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를 독점하게 될 국가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한 후에 '전자주민카드제도'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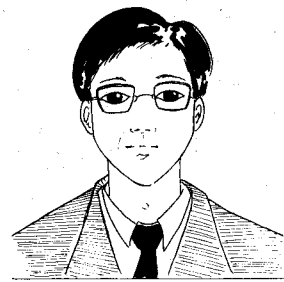
국민에게 선택 기회를

얼마전 호주정부에서 한국의 모변호사에게 '도대체 한국의 주민등록증제도가 무엇인가'라는 문외수가 왔다. 폭력남편이 있는 한 한국의 중년여성이 한국에서는 도대체 숨어서 지낼 수가 없어 망명요청을 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사실은 개인의 '숨어살 권리'조차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이 비록 감시와 통제의 의도로 만들어졌다 해도 30년간 우리사회에서 관습처럼 굳어진 이상 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힘을 지 모른다. 하지만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정보화추진계획'을 비롯해 정보화사회의 기본법과 제도를 충실히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강단시론

김현주

(국어국문학과 교수)



요즘 문화와 관련된 서적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인문교양서의 베스트 셀러 목록에 문화관련 서적들이 눈에 많이 띄는 걸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얼마 전에는 문화 유적 답사 안내책자가 공전의 인기를 얻어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일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와 유사한 책들이 지속적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의 문화유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요즘에는 우리 문화유적뿐만 아니라 해외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까지 일어나 세계화 시대를 실감케 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요즘의 흐름을 이룬다는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여행안내서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문화국민이 거의 다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의 안을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문화에 대한 인식과 향유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으며, 어떤 분야에서는 문화수준의 향상이라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여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요즘에는 문화라는 것이 유적이거나 유물에 대한 지식 정도를 좁소하게 이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문화란 인간의 모

인다. 이를테면 '○○문화의 수수께끼', '○○문화 벗겨보기', '○○문화 뒤집어보기', '파라독스의 문화', '○○○○의 일급비밀' 등과 같은 것인데, 이들은 대부분 말초신경을 자극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란 수수께끼나 암호 풀듯이 접근할 대상이 결코 아니며, 사람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융해되어 있는 산물로서,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극적인 관심 유발보다는 차분하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문화에 대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하겠고, 또 그런 방식이 아닌 모처럼 일어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마치 냄비 달구듯이 달구었다가 급방 식혀버리지 않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점화 확대시키고 심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극적인 현상의 이면엔 출판사들의 상술이 은근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알맹이 없는 문화복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작시키고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럼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몫이다. 정부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조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문화국민의 참모습

는 삶의 양식들이 빚어낸 총체로서 물질적인 행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물질문화는 언제나 정신적 토양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해석되고, 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물질문화는 언제나 위대한 정신문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승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토양이 되었던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고 승계하는 일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적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사회의 관심과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신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개미 허리 조르듯 인색할대로 인색한 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대접 풍토가 아닌가 한다.

물질문화, 정신문화

또 요즘에는 평범하지만 진솔한 의미를 가진 문화적 대상보다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내력이나 비밀스러운 의미를 내포한 문화적 대상에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되었지만 너무 그쪽만을 추구하다보면 문화 알기를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요즘 문화 관련 책의 표지들은 거의가 자극적인 관심 유발을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우리 나라 공동서관의 연간 도서관비로 편성된 예산 몇십억이 월드컵 재정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 않아도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 예산이 일본의 일개 현(縣) 수준이라든지, 미국의 일개 대학 수준이라든지 하는 얘기가 있어 창피한 터였는데, 그런 예산조차 아예 전용된다고 하니 국민의 문화수준은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또는 말만 하면 삶의 질은 저절로 향상되는 걸로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문화 관련 예산이 삭감과 전용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문화수준이니 삶의 질이니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어휘가 아닐런지 모르겠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찬물을 끼얹지는 말라고. 우리는 모처럼 일어난 국민들의 우리 문화 알기의 싸움을 소중하게 키워나가기 위해 모두가 예지를 모아야 하겠고, 또 문화적 삶을 위해 조그마한 일부터 실천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 양질의 문화서적을 탐독하고,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것같은 사소한 실천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문화의 풍요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되새겨볼 때인 것 같다.

고립되는 대학교정

“외부단체의 교내집회 불허하겠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외부단체의 교내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달 19일 고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가보안법 철폐와 노동악법 개정을 위한 '96 노동·청년·학생 문화제'가 학교측의 병력요청으로 잠정 연기 되었으며 24일 성균관대에서도 총학생회와 민주노총이 주최할 예정이던 '노동법 개정투쟁 승리를 위한 문화공연'을 불허해 문화제가 무산되었다.

이번 달 3일 우리학교에서 열렸던 학생의 날 행사 '96 당당하게' 또한 전경의 제지로 당초계획과는 다르게 치뤄졌다.

학교측에서는 외부단체 주관행사는 학내에서 개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전에 여러학교

에서 열린 청소년 음악회, 열린 음악회 등의 외부단체 주관행사가 학교측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치뤄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원칙이 언제부터 생겼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이화여대에서 열린 인권영화제가 처음에는 허가가 났다가 일부교수들의 반대와 문제부의 압력으로 불허되어 불법으로 치뤄진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상업성을 띤 행사는 가능하고 정치성이 있는 행사는 불가능한, 교내집회를불허방침이 대학측의 자의적인 판단과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지난 8월 한총련사태 이후의 공안정국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은 단순히 학문을 공부하는 곳의 의미를 넘어서는



▲예정과는 달리 거리에서 치뤄진 '96당당하게'

우리의 역사속에서 그러했고 그것은 또한 대학의 책임이자 소명이었다.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대학내에서는 이루어져왔고 여러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그래도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서 집회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가 가장 자유로와야 할 대학에서까지 외면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소리가 높다.

(박기람 기자)



변화의 파도에
당당히 도전해 가는 효성
세계를 열어갑니다.
미래를 열어갑니다.